



기후변화현황에 대한 민관차원의 접근 방향 모색

지구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그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 마련과 더불어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인식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파악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평균온도는 197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약 0.5℃ 증가하였고, 강수량은 약 304.5mm/year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그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도의 현재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환경부, 에너지 관리공단 등 기후변화 인식도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조성 및 여건 마련을 위해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기후변화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전문가의 설문문을 통해 강원도 정책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인지여부에 대해 강원도 일반인의 경우 69.6%, 공무원 89.6%로 과반수 이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인지

하고 있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 인지도는 공무원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대' (92.5%),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해수면의 상승' (92.2%), '한류성 어종이 사라지고 열대성 어류 증가' (85.0%) 순으로 나타나고, 공무원의 경우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해수면의 상승' (99.5%), '한류성 어종이 사라지고 열대성 어류 증가' (98.1%),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 (97.2%)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일반인의 92.8%, 공무원의 96.7%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지도로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가뭄과 물부족', '집중호우와 폭풍우', '고온, 열파와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이 기후변화에 매우 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하였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일반인 84.3%, 공무원 85.4%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의견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강원도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3.0%), '기후변화의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원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9.7%) 순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강원도가 어느정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8.7%), '강원도 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 개념에 대한 인지는 공무원의 84.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57.3%에 그쳐 공무원의 인지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의 장애요인 중 공무원의 50.0%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로 일반인의 44.0%, 공무원의 40.6%가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일반인 교육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에 따른 감축 제한에 대한 의견에 국제 규제 실시 전에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가의 응답에 일반

연구요약

인 78.5%, 공무원 89.2%로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정책적 조치인지 여부에서 공무원은 정책적 조치의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이상의 인지를 보이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협약을 통한 저감 노력'(59.7%), '신재생에너지 보급'(50.9%), '탄소 배출권 거리제 실시'(59.4%), '탄소세 도입'(64.5%)의 항목에서 '몰랐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정책적 조치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지여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제공하는 기후변화, 에너지절약에 관한 교육, 홍보 참여 여부로 공무원은 '있다'에 무려 80.7% 보이고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없다'에 68.6%로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일반인의 39.6%가 '해양, 수력,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보급'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공무원은 43.4%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는 '걷기 자전거타기 등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이 3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다음으로 '공공기반시설 및 신, 중축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가 25.6%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의 의견이 61.3%로 과반수이상이 응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평소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담부서 신설, 조례제정, 연구센터 설립 등 기후변화 행정체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조금 더 인지하고 있다.

대체로 강원도의 3G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행정체계 구축 등 지자체 중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은 몇몇 사례에서 선도적으로 행동하는 점이 인정된다. 종합적인 평가에 따르면,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매우 잘한다'와 '잘하고 있다')이 '보통이다'와 부정적인 응답('못하고 있다'와 '매우 못하고 있다')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보면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중 산림(흡수원) 확대 및 탄소배출권 확보계획이 '가장 잘 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녹색일자리 정책을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부존자원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태양열주택>태양광·열>풍력 순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에너지빈곤층 해소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강원도의 일반시민과 공무원은 기후변화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정보에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삼고, 기후변화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 수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홍보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관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